

# 여야 '드루킹 특검' 갈등... 멀어진 6월 개헌

###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野 "특검 받으면 국회 정상화" 與 "野 대신 불복 선언" 격돌 소득없이 종료... 처리시한 넘겨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로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이 무산될 것이 확실시된다.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동시투표의 전제조건으로 23일까지 처리되어야 하는 국민투표법이 결국 개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가 이날 맺글조사 사건(명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제 도입을 놓고 격돌한 때문이다.

야 3당은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연합 전선을 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오히려 '대선 불복'이라고 맞붙을 뵈었다.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가 가능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6월 개헌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여야 극적인 합의를 이룰 경우 6월 개헌 불씨가 아주 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 2당인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뜻이 전혀 없는데 여야가 이날을 기점으로 야에 6월 개헌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분위기다. 결국,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는 뒤로 한 채 본격적인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충돌, 결렬됐다. 특히 이날 회



‘빈 손’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정전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비공개 회동을 위해 장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동은 야 3당이 특검법 수용 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공동 입장을 밝힌 후 마련된 터라,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특검 대치에 개헌 무산 이슈까지 겹치며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국면에서 여야는 대립의 극한 지점에 마주 서게 됐다.

다만,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자는 지적이 민주당과 등 일부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외형상 충돌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여야는 지난 주말 물밑 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지만 결국 특검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이미 파국을 예고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별도 회동을 하고 드루킹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들은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며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

서를 국회에 함께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에 대해 '선(先) 경찰조사'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야당의 특검 압박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의장 정례회동에서도 야 3당의 '대선 불복 여론조작사건' 주장을 문제 삼으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고, 망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통과 마지막 순간으로 삼정한 이날을 넘기면 다음날 곧바로 개헌 무산을 선언하고 강력한 대야 공세를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 6·13 선거 현장

### 구청장·군수 후보

#### 입택 "남북회담, 한반도 평화 출발점 되길"



입택 더불어민주당 동구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협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정상 핫라인 개통,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결정과 북미 정상회담 예정 등의 가시적 성과를 내며 남북 화해에 순풍이 일고 있다"면서 "냉전시대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찾아온 이번 변화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은 선택의 문제, 비용의 문제가 아니며 시간이 걸리고 부담이 있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할 우리 민족 모두의 숙제다"고 덧붙였다.

#### 문인 "노후화된 본촌산업단지 환경 개선 추진"



문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노후화된 북구 본촌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본촌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30년이 되어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산단 주변 유계승강장 신설 및 정비 등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으로 산업생태계를 재생하고, 근로자숙소 리모델링 등 근로자 정주환경을 확충하여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생산성 있는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본촌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7개 부처 정부 합동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윤난실 "광산구청부터 워라벨 문화 시작"



윤난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일하기 좋은 광산의 워라벨은 구청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구청장으로 선출되면 구청장부터 솔선수범 정시 출퇴근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제도들을 존중하고 연가·휴가·휴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등, 구청에 워라벨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부구청장 직접인사권을 민선 7기에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예측가능한 공무원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광산을 일자리 도시로 만들겠다.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차원에서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기 좋은 광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 "송귀군 지지"



송귀군 민주당화당 고흥군수 예비후보(사진)는 23일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이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흥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뛰었다가 무소속 출마로 선회했던 김 전 서장은 이날 무소속 출마를 철회하고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흥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행정력이 검증된 참신하고 유능한 군수가 필요하다"면서 "그 적임자는 송귀군 후보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이미 고흥 부군수를 역임했고, 당시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로 군민과 공직계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정욱·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홍준표 "순위 조작 가능한 포털 댓글제 법으로 바꿀 것"

### 기사 클릭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연결...한국당 '아웃링크' 방식 추진

자유한국당은 23일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조작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형성되는 공간인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말이 있다"며 "포털은 취재 기자 한 명 없이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 장사를 하면서 실제 이익은 다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모든 방송과 언론을 합친 것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은 광고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며 "순위조작과 여론조작이 가능한 댓글제도도 국회 입법을 통해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링크' 방식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의 기사를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한국당은 이같은 방식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든다고 보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을 개정해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뀌어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등 포털이 독자에게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되도록 해 그곳에서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간 검색 결과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도 추진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국당은 또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인터넷 댓글조작을 사주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3개를 김성태(비례대표)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

리얼미터 67.8%... 1%p 올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올라 67.8%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7.8%로 전주 대비 1.0%p 인덱스(p) 올랐다. 이는 19일 발표된 주중(16~18일) 중간집계(67.6%)보다 0.2%p 오른 수치다.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1%p 오른 27.8%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2.7%p 오른 53.1%로 1위를 지켰다. 자유한국당은 22.0%(0.1%p ↑)로 5주 연속 20%대를 유지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5.8%(0.1%p ↑), 3.9%(0.3%p ↓),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3.3%로 한 주 전과 같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 나주, 2층 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5200만원
- H. 010-6838-1230

